

“정부, 25년전 원전 부실시공 알고 있었다”

1994년 한빛 3호기 사용전 검사시설 보고서에 ‘구멍 다수 확인’ 당시 영광 주민들 지적도 목살...5년 뒤 안전성 양호 상태로 바뀌어 김용국 공동행동위원장 “건설사·감리기관 등 한통속 국민 속였다”

정부가 25년 전부터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격납건물의 부실 시공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격납건물의 구멍이 확인될 때마다 뭉칠식 조치로 일관했다는 주장이다.

지난 27일 영광군 영광읍에서 만난 김용국(59)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최근 한빛원전 부실공사에 이 제서야 확인되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데 이미 영광 주민들은 원전 건설 당시부터 지적했다”며 “하지만 지적은 모두 목살당했고 원전 구조물의 안전성은 양호한 상태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공개한 ‘영광 원자력 3호기 사용전(시설) 검사 건설종합시험 검사보고서’ 검사지적 사항표를 살펴보면 ‘격납 건물 라이너플레이트(철판)에 대한 점검

결과 개구부 또는 관통부 주변에 일정 규모 이상 콘크리트 Void(구멍)로 추정되는 위치가 다수 확인됐음’이라고 나와있다.

이 보고서는 한빛 3호기 상업운전을 앞두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원전 건물을 검사해 1994년 8월 작성한 것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시정요구내용으로 ‘지적된 부위를 포함해 라이너플레이트 후면의 Void 존재 여부를 점검해 결과를 제출하고 Void에 따른 라이너플레이트 건전성을 평가한 결과를 제출하거나 보수결과를 제출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같은 해 10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작성한 ‘영광원자력 3호기 사용전검사보고서’에서도 ‘격납건물 외벽 철근 배치 중 관통부 주변 등에 철근이 밀집돼 있어 현 상태

에서 시공하면 Void(구멍) 발생 현상 및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 거동에 문제가 발생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이라고 적혀 있다. 또 ‘설치된 라이너플레이트에 허용 값 이상의 변형이 다수 발생했으나 총괄적인 안전성 평가,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이 미흡함’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5년 후 원전의 안전성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변모했다. 당시 원전 운영을 맡았던 한국전력공사 영광원자력본부가 1999년 8월 작성한 ‘영광원자력 1·3호기 격납건물 내부 정밀 안전진단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한빛 3호기에 대해 ‘구조 및 내구성 측면에서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혀있다.

김 위원장은 원전 건설업체(현대건설)부터 감리기관, 당시 과학기술처, 한전, 원자력안전기술원까지 한통속으로 국민을 속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원전 건설 당시 작업자들은 ‘격납건물 외벽에 철근이 많이 들어가 콘크리트를 제대로 타설 할 수 없는 상황’

이라고 이야기했다”며 “망치로 두드려만 봐도 공극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몰랐다’는 원전측의 해명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광 주민들은 1994년부터 원전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목살 당했다. 1994년도 국가에서도 이 내용이 거론됐지만 한전은 ‘이상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잠잠해졌다.

격납건물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구멍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현재 격납건물 외벽 공극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슈미트 해머(콘크리트를 두드려 경도를 측정하는 기기)는 결면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중심부로 갈수록 많은 구멍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차원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원전 부실공사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격납 건물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됐을 때 원전을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채용 비리’ 남양학원 보조금 반환소송 각하 광주시교육청 8억여원 폐일 위기

광주시교육청이 교사 채용비리가 적발된 학교법인 남양학원(동아여중·동아여고)을 상대로 인건비 보조금 등 반환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사실상 8억 원이 넘는 돈을 폐일 위기에 놓였다. 광주교보 행정1부는 26일 광주시교육청이 남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결합보조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을 각하했다.

지난해 1심에서는 “남양학원은 시교육청에 8억2155만4920원을 반환하라”고 원고인 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교육청이 보다 간단하고 경제적인 절차인 지방세 징수 절차를 따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남양학원이 보조금을 받은 것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해 지방세 징수 절차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을 요구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지방세 징수 절차에 따라 남양학원에 지방세 납입고지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보조금 반환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방세 징수는 채권 소멸시

효가 5년에 불과해 시교육청은 시효를 연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조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채권 소멸시효가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교육청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남양학원 측은 보조금을 반환할 의지가 없을 뿐더러,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를 찾아가 수익용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펼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남양학원이 자발적으로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뚜렷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분할납부를 요청하면 충분히 수용할 생각이었으나 남양학원 측이 전혀 납부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추후 대책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학원은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뇌물을 받고 교사와 직원을 부당하게 채용한 사실이 적발돼 정교사 6명의 임용이 취소됐다. 이에 시교육청은 이들 교사가 근무한 기간 동안 지원한 인건비와 기관부담금 등을 재정결합보조금으로 산정해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현역 육군 중사가

외국 여성 성추행

광주서부경찰, 임의동행 조사

육군 현역 부사관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A(25) 중사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A 중사는 이날 자정께 광주시 서구 한 유흥가 거리에서 몰도대 국적의 20대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다.

A 중사는 피해 여성의 뒤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밀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중사를 상대로 기초 조사를 한 뒤 일단 귀가 조치하고 사건을 관할 헌병대로 이송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놀면서 배우는 ‘여름 독서교실’

29일 광주시 북구 운암도서관에서 열린 여름 독서교실 ‘도서관 속 수상한 실험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이 강사와 함께 비눗방울을 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또... 대학생 목숨 앓아간 음주운전

시민들 제보로 뺑소니 도주범 검거

만취한 20대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시민들의 제보로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29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은 숨지게 한 회사원 백모(28)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28일 새벽 3시40분께 서방사거리에서 산수오거리 방향으로 스포티지 차량을 몰고 가던 중, 광주교대 앞 도로에서 이 학교 2학년 P(20)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이다. 백씨의 차량에 치인 P씨는 맞

은편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조사결과 백씨는 직장 선·후배들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던 중, 적색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P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로 사망사고를 낸 백씨는 개정된 운항호법을 적용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이나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공사장서 술 취해 잠들자 깨워준 여중생 추행 50대 ‘징역형’

대낮 공사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자신을 깨워준 여중생을 되레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2시에 순천시 도심의 한 건축 공사장에서 술에 취해 잠

을 자던 자신을 발견한 뒤, 112에 신고하고 흔들어 깨운 여중생 B(14)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 B양을 강제로 깨우고, 달아나는 B양을 붙잡아 다시 깨운 뒤 불에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B양이 피고인 A씨를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아들 의사사 용의자 조사 받는 고유정 남편 “억울하다”



○전 남편 살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 현 남편 A씨가 친 아들의 의사사와 관련해 자신이 경찰로 부터 과실치사 혐의 용의자로 조사받고 있는 것에 대한 억울하다는 입장을 거듭 토로.

○A씨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판에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 관련, 청주 상당경찰서의 부실·불법 수사 의혹

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이에 관한 민감풍 경찰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

○자신을 고유정 의붓아들의 아버지라고 밝힌 A씨는 “고유정의 말만 믿고 내가 잠버릇 때문에 아들을 발로 눌러 질식 시켜 숨지게 했을 가능성만 고수하고 있다”며 “경찰이 자신들의 부실 수사를 덮기 위해 죄 없는 사람을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115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 보청기

oticon PEOPLE FIRST

광주지사 3주년 특별행사

062-364-8800

- ✓ 부담 없는 무료 청력 테스트
- ✓ 30일간 보청기 무료 테스트
- ✓ 배터리 1+1 추가 증정
- ✓ 청각 장애인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홈케어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고객님들을 위한
무료 가정방문 출장 서비스

화정역 4번 출구 / 동성역 4번 출구에서 100m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5 1층 102호